광주·전남 농민단체 회원들이 쌀 저가판매를 시작한 한 대형 마트를 찾아가 항의방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민들 쌀값 하락 반대 시위 속

할인점들 쌀 저가판매 '물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쌀값 하락에 대해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할인점들이 전남쌀 저가판매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할인점은 농협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의방문에 나서자, 즉석에서 저가판매를 시정하겠다고 해 전남쌀 제값받기 운동을 무시한 '얄팍한 상흔'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지부 위두환 사무총장 등 농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2일 광주지역 할인점을 방문, "쌀 수입개방과 한·미 FTA 협상 등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쌀을 저가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원들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왕래하는 할인점 출입구에 쌀을 쌓아놓고 시위를 벌이는 한편 할인점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할인점 측에서는 "저가판매를 하지 않겠으며, 전국 매장에서도 저가판매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고 판매중지 사유를 공지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지난 5월 저가판매를 중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저가 쌀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 같은 약속을 깨뜨려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헐값판매와 미끼상품으로 끼워파는 '상술'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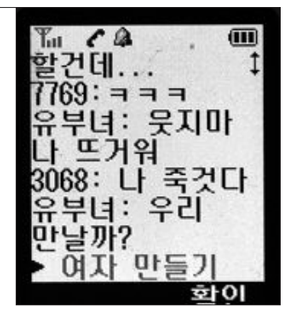
롯데마트 상무점은 롯데쇼핑 창사 27주년을 기념해 2~8일 '햇살한공기(20kg)' 브랜드를 현 시세(4만500원)보다 4천700원 싼 3만5천800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또 이마트 상무점도 1~8일 '이맛쌀' 브랜드를 4천300원 할인한 3만7천500원에 판매키로 했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향후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060' 옛말…휴대전화 스팸메일 날로 지능화

발신은 010·011… 걸어 보니 '음란 스팸'



회사원 정모(47·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최근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 제목은 '너만 봐…∧∧'.

정씨는 음란 스팸메일인줄 알고 삭제하려 했으나 전화번호가 '010-8682-60××'로 시작돼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예쁜 여자얼굴이 화면에 뜬 후 야릇한 문장이 이어진 것이다.

'유부녀 : 집…지금 샤워했어요

8895 : 나도 할건데…
7769 : ㅋ ㅋ ㅋ
유부녀 : 웃지마. 나 뜨거워
3068 : 나 죽것다
유부녀 : 우리 만날까?…'

다수의 회원이 접속, 채팅을 하면서 ▲내 여자 만들기 ▲나도 참여하기 등의 형태였다. 이용약관에 따른 사용료는 하루 24시간 동안 ▲회원 전체보기 2천900원 ▲채팅방 입장 300원 ▲내 사진 올리기 350원 ▲찜(프로포즈)하기 250원 ▲안심 통화하기 2천500원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음란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진화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스팸으로 인식된 후 '010' '016' '011' 등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음란스팸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전화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전화로 번호를 누를 경우 착신이 되지않고 "메시지나 전화번호를 남겨달라"는 응답만 나올 뿐이다.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음란스팸은 전혀 새로운 형태"라며 "통신회사 측과 협조해 발신자를 추적·조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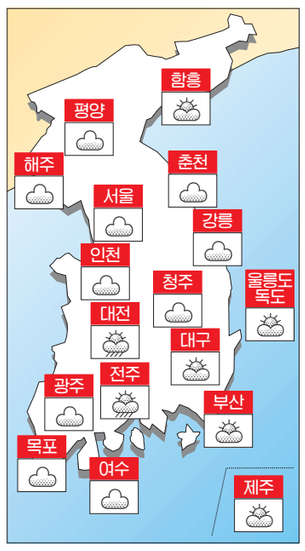
광주시청 '안내 로봇' 'iMARO' 로봇 2대가 2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민들에게 청사 안내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KT가 '유비쿼터스 로봇 시험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 이 로봇은 높이 150㎝, 무게 95㎏로 광주시의 업무와 실과 배치정보, 각종 행사, 교통·관광 정보, 일기예보, 뉴스 등을 알려주고 기념촬영 포즈까지 취해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흐린 날씨 서성대는 구름

고기압이 후면에 들면서 맑은 뒤 흐려지겠다.

11월 3일 (음 9월 13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림	9~22℃
목 포	흐림	10~20℃
여 수	흐림	13~20℃
완 도	흐림	11~21℃
구 례	흐림	7~23℃
해 남	흐림	7~21℃
장 흥	흐림	7~21℃
고 흥	흐림	6~21℃
순 천	흐림	6~23℃
영 광	흐림	8~20℃
진 도	흐림	7~21℃
전 주	흐림	8~21℃
남 원	흐림	3~21℃
정 읍	흐림	7~2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2:13 --:-- 썰물 05:17 17:42
여 수 밀물 07:11 19:30 썰물 00:57 13:13

▲해뜸 06:55 ▲해짐 17:37 ▲달뜸 16:02 ▲달짐 03:5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 씨						
최저/최고	12/20	7/13	4/10	2/12	4/14	6/15

광주교대생, 초등교사 선발 축소 반발

임용고시·수업 거부 투쟁

광주교육대학생들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신규 초등교사 감원에 반발, 수업거부와 함께 임용고시 원서 접수 거부 투쟁에 나섰다.

광주교대생들은 2~3일 수업을 거부하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 안정적 교원양성 임용정책 수립과 학급총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앞서 1일 '2007년 교원수급정책 전면 재조정 등을 위한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벌여 수업거부를 결의했다. 찬반투표에는 재학생 2천311명 가운데 1천518(65.7%)이 참여했으며, 이 중 1천326명(87.4%)이 찬성했다.

또 520여명의 내년 응시대상자(미임용자완전발령추진위 소속 70여명 제외)는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갖고 임용시험 접수 거부 투쟁에 나선 상태다. 현재 150명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공식 접수처인 시·도교육청이 아닌 총학생회에 원서를 제출했다.

교대생들은 2일 양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부가 교원부족을 이유로 2004년 광주교대 신입생 입학정원을 500여명으로 늘려놓고 이제 와서 저출산을 이유로 신규 교원을 줄이고 있다"며 신규 교원 채용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신규 초등학교 교사를 올해(300명)보다 150명 적은 150명, 전남도교육청은 올해(350명)보다 50명 적은 300명 등 총 4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3일까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중등교사 임용고시 오는 12월3일 실시

광주 175명·전남 136명 선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일 200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해 광주 175명, 전남 136명 등 311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광주의 경우 공립은 중등학교 교사 102명, 보건 및 사서교사 9명, 전문상담교사 5명, 미임용등록자 50명 등 166명이다. 사립은 공동모집을 통해 9명을 신규 채용한다.

전남은 공립 115명, 미임용등록자 20명, 사립 1명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6~10일 시교육청 별관 고사관리실과 도교육청 민원실·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

1차 시험은 다음달 3일 실시하고 면접은 2007년 1월16~18일까지 3일간이며 최종합격자는 2007년 1월30일 발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교원평가제 반대

"1만명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교육부 앞에서 '교원평가제 입법예고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22일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관계를 왜곡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요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일 교원평가제를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며 "파행적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교원평가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訴 주민 패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2일 인천 부평구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불복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용지부담금=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부담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그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시의 경우 부과징수 조례가 시행된 2002년 10월부터 3천351건(55억3천6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올 현재 2천537건(42억8천500만원)을 환급하지 못했다.